

2025년 9월 시청자평가원 활동실적

방송사명(법인명) : 주식회사 연합뉴스티브이

1. 회의 개최

○ 일시 및 참석인원

일 시	참 석 인 원		
	시청자평가원	시청자위원회	방송사측
-	-	-	-

2. 시청자평가프로그램 운영 실적

프로그램명	편성시간	편성시간 변경
바로보는TV 옴부즈맨	본방송 매주 일요일 03:50~04:20 (재방송 매주 월 00:30~01:00)	해당사항 없음

○ 방송현황

※ 프로그램 제목과 평가원 진술 주제를 3줄 이내로 기술

평가원명	방송일	방송 주요 내용	비 고
김홍태	9/7	[와이드08] '말로만 엄벌'이 장난 부추기나...해외선 중형에 배상까지 [와이드11] 내일부터 피성범죄 특별단속..."신고 보상금 최대 5억"	
안지연	9/14	[와이드08] "학폭, 부모부터 알아야"...학교전담경찰관이 나섰다 [뉴스현장] "알로·스투시 80% 할인"...SNS 광고에 혹했다가 '날벼락'	
김정원	9/21	[와이드11] 갈수록 중요해지는 개인정보..."기본권 수준으로 격상해야" [뉴스 15] 정부·국회, 강력 대처 나선다..."정법적 과징금도"	
최미연	9/28	[뉴스 투나잇] 전국 법관, 대법관 증원 토론 예고...조희대 "법은 통치 수단 아냐" [와이드17] 민주 "사법개혁 자초한 건 사법부"...국힘 향해선 "적반하장"	

3. 시청자평가원 변동사항 '변동사항 있음'

구 분	성 명	전 · 현직	평가원 선임일	비 고 (변경사유 등)
활동	김홍태	대한변호사협회 권익위원	2018. 06. 28	-
해임	임윤주	이화여대커뮤니케이션 미디어 연구소 연구원	2021. 11. 28	출산
활동	안지연	동명대학교 광고홍보학과 초빙교수	2023. 01. 31	-
활동	최미연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선임연구원	2024. 07. 25	-
선임	김정원	한양대학교 ERICA 미디어학과 교수	2025. 08. 21	신규

붙임 : 1. 평가원 진술 및 답변내용 1부.

2. 시청자평가원 방송원고 1부.

[붙임1]

<평가원 진술 및 방송사측 답변 내용>

방송일시	평가원명	평가원 진술내용	답변내용
2025 9/7(일)	김홍태	지난 달 31일 뉴스1번지에서는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게 맞는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는데, 법 논리상 부과되는 게 맞지만 그동안 노인 빈곤 방지 등을 이유로 집행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최근 관련 법이 발의되면서 다시 논란으로 떠올랐다고 전했습니다. 건강보험법 과 소득세법 등 현행법에 따르면, 건강보험료는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 같은 사적연금 소득도 부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그동안 사실상 부과되지 않아 왔는데, 노인 빈곤을 심화할 수 있고, 퇴직연금 등을 일시금으로 선택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데다 이중과세 논란으로 번질 수 있는 만큼 '법 적용의 예외' 영역으로 남아있던 겁니다. 그런데 감사원과 국회에서 '법적 근거 없는 위법'이라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예비 은퇴자들의	시청자들이 좀더 쉽게 와닿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항을 소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퇴직연금 관련 방향성에 대해서도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신경쓰겠습니다.

		불안감이 커지고 있었는데요, 그런 가운데 최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일정 소득 이하 사적연금에 대해 건보료를 면제하는 법안을 발의해 이목을 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연금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는 은퇴자에 한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하의 사적연금 소득에는 건보료 부과를 면제하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되면 건보료 부과 대상을 명확히 규정해 논란의 여지가 없어지겠지만 예외에서 제외된 사람들은 건보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정부는 방향성은 맞다면서도 조심스러운 입장인데요, 조충현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방향성에 대해서는 맞다고 생각한대며, 다만 국민의 수용성이라든지 또 공적 연금과 사적 연금 간의 형평성, 또 사적연금 상품 종류별 과세 여부라든지 방식 등이 다양하다고 전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도 "정책적 결정 사안이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는데요, 10년이 다 돼가는 '배려냐 원칙이냐' 논란을 마무리 짓기 위해선 각 주체들이 동의하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해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는데요, 매우 민감하면서도 시청자의 생활과 직결된 사안입니다. 법적 근거와 그동안의 관행, 국회의 법안 발의까지 흐름을 설명한 것은 시청자가 현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연금소득자 입장에서 피부로 와닿는 건보료 부과 시 예상되는 구체적 영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였는데요, 예비 은퇴자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나 연금 일시금 선택 증가 같은 현실적 문제를 수치를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들에게 단기적인 불안이 있더라도 장기적 방향을 이해하고 사회적 합의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언급도 필요했습니다.	
--	--	---	--

2025 9/14(일)	안지연	최근 미국에서 구금됐던 우리 근로자들이 전세기를 통해 귀국길에 오르게 됐습니다. 결부된 사안이었던 만큼 사건 발생부터, 진행경과, 귀국 까지 모든 사항을 면밀하게 보도한 내용이었습니다. 앞으로 재입국 문제에도 차질이 없는 지 계속 지켜보며 보도해가겠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구금됐던 우리 근로자들이 전세기를 통해 귀국길에 오르게 됐습니다. 결부된 사안이었던 만큼 사건 발생부터, 진행경과, 귀국 까지 모든 사항을 면밀하게 보도한 내용이었습니다. 앞으로 재입국 문제에도 차질이 없는 지 계속 지켜보며 보도해가겠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구금됐던 우리 근로자들이 전세기를 통해 12일 새벽,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이들이 재입국할 때 불법체류 기록이 남아 비자 발급이나 입국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국 측과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보도는 앞서 예정했던 귀국 일정이 돌연 지연된 배경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구금된 한국인 직원들은 숙련된 인력들로 평가하며, 미국에 남아 계속 일하면서 미국 근로자들을 교육하는 것을 권유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체포와 구금 생활로 심신이 지쳐있는 근로자들이 한국으로 돌아갔다 오는 제안을 미국 측이 존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요청한 수감 등 신체적 숙박 없이 전세기까지 이동해야 한다는 것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울러 외교부 장관은 장기적으로 우리의 투자에 맞춰서 새로운 비자 형태를 만드는 등 불편을 막기 위한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도는 미국에서 구금됐던 우리 근로자들이 전세기를 통해 귀국길에 오르게 된 과정을 전달했습니다. 귀국 일정이 지연된 이유, 불법체류 기록과 재입국 불이익 문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과 승인 사항까지 차례대로 짚으며 사건의 흐름을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 특히 핵심 쟁점을 정리해 시청자들에게 전달해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단
-----------------	-----	---

		순히 귀국 소식을 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과정과 의미를 설명해 맥락을 분명히 했다는 점도 보도의 장점입니다. 후속 보도를 통해 귀국 이후 우리 근로자들이 다시 생활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현실적 한계와 지원 방안 등을 함께 다룬다면, 이 사안이 갖는 함의를 더욱 분명히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5 9/21(일)	김정원	지난 4월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 이후 통신3사 모두 개인정보 유출 논란에 휩싸이면서 시민단체들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SKT는 방통위의 위약금 면제 기간 연장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고, 참여연대는 "3~4년간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위약금 면제 기간이 열흘에 그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개인정보를 단순 데이터가 아닌 개인의 기본권 수준으로 취급해야 하며, 범부처적 컨트롤타워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통신사와 금융권 해킹 사고에 직접 나서 강력한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보안 사고를 반복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을 포함한 강력한 대처가 이뤄지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회에서는 정부의 강제 조사 권한 확대와 24시간 이내 신고 의무화 등을 담은 법안들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현행법상 '중대한 침해'에만 가능했던 민관 합동조사단 구성을 일반적인 침해 사건까지 확대하고, 통신사 등의 해킹 신고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들이 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의 통신사 개인정보 유출 관련 보도는 사건의 경과와 정부의 대응, 그리고 제도적 개선 방안까지 포괄적으로 다뤘다는 점에서 균형 잡힌 보도였습니다. 시민단체와 전문가 의견을 통해 다각적인 시각을 제공하고, 현행법의 한계와 개정 필요성을 명확히 설명한 점도 돋보입니다. 특히 개인정보를 기본권	기본권 수준이라는 용어가 시청자들에게 좀더 쉽게 다가올 수 있도록 설명하고 기존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등을 향후 좀더 자세하게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안을 통해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를 '기본권 수준으로 격상'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현재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와 기본권 차원의 보호가 어떻게 다르며, 실제 법적·제도적 변화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면 시청자들이 전문가 제안의 의미를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2025 9/28(일)	최미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여권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안과 추천 방식 개선안이 주요 의제로 토론될 예정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세종대왕의 법 철학을 강조하며 법은 통치 수단이 아닌 국민 권리 보장의 토대라고 밝혔는데, 일각에서는 이를 사법개혁안에 대한 우회적 비판으로 해석했습니다. 법관 대표회의 분과위는 대법관 증원 필요성에는 경찰할 부분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대법관 수가 급격히 늘 경우 전원합의체 운영이 단순 다수결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이번 회의가 정치권과 맞닿은 사법개혁 논의 속에서 사법부의 공식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연합뉴스TV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사법 신뢰를 떨어뜨렸으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회동설 논란에는 거리를 두면서도 사법부의 정치개입 의혹을 핵심 쟁점으로 강조했고, 국민의힘에 반헌법적 범죄 수사 협조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와 기재부 개편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회동설'을 "조작된 음성파일을 이용한 정치공작"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민주당의 사법개혁을 1인 독재 체제로 가려는 시도라고 주장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보도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별도의 기획 리포트 제작을 검토하겠습니다.

		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가짜뉴스가 아들 인생을 망쳤다’고 언급한 점을 문제 삼으며 여론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대구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어 강경 보수층을 결집시키고 대어 투쟁 수위를 높였습니다. 연합뉴스TV 보도는 사법개혁을 둘러싼 정치권과 사법부의 대립을 통해 헌안의 시의성과 파급력을 효과적으로 보여줬습니다. 특히 법관대표회의 논의, 여야의 공방, 장외 집회라는 흐름을 연결해 시청자가 사건의 큰 그림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강점입니다. 그러나 개별 사건의 배경과 쟁점, 대법관 증원과 같은 제도 개편이 실제 사법부 운영과 국민 권리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한 해설이 부족해 갈등 구도만 강조된 한계가 있습니다. 이는 결국 사법개혁이 단순히 정치 공방의 소재가 아니라 사법부 신뢰 회복과 제도 개선의 과제를 안고 있음을 시사하며, 향후 단순 전달에 그치지 않고 제도적 함의와 대안을 함께 짚어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	--	--	--

[붙임2]

<시청자평가원 방송원고>

● 김홍태 시청자평가원(25. 09. 07 방송) :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719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한주간 보도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TV를 말한다, 김홍태입니다. 지난 <와이드08>에서는 허위 폭발물 협박이 늘어나는 배경을 설명하면서, 엄벌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실제 형량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장난’이 늘고 있다는 지적을 전했습니다. 2년 전 신림동 흥기 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상에서 ‘살인 예고’가 잇따랐고, 사회적 불안은 커졌는데요, 상당 수가 장난 글이었습니다. 처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지난 3월 ‘공중협박죄’가 새로 시행됐는데요,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를 겨냥해 공포를 조성하는 협박을 별도로 처벌하자는 취지라고 합니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인터넷에 ‘인천공항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고 하면 뚜렷한 피해자를 선정할 수 없어 처벌이 애매했는데, 공중을 협박하는 죄를 처벌하는 공중협박죄가 신설됐다고 전했습니다. 기존 협박죄의 상한이 징역 3년·벌금 500만 원이었다면, 공중협박죄는 형량이 한층 강화됐는데요, 조만간 제주서부경찰서 형사과장은 5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강화된 법에도 불구하고 실제 처벌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요, 법이 도입된 이후 지난달까지 테러 협박글 관련 범죄는 72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실제 기소된 건

절반 정도였고, 구속상태로 검찰에 송치된 경우도 10%가 채 안된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 첫 선고가 나왔는데 벌금 600만 원에 그쳐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는데요, 지난 5월 직접 만든 사제 폭탄을 들고 30분간 거리를 돌아다니며 시민을 위협한 혐의의 30대에 대한 선고인데, 지적 장애를 갖고 있던 상황 등이 양형에 반영된 것입니다. 비슷한 범행의 경우 해외에선 거의 실형을 선고하고 역대 배상금까지 물리며 말 그대로 엄벌하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해외에서는 폭발물 위협으로 동원된 경찰력 배상 책임은 물론, 이로 인해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피해를 봤을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규모가 더 커지는데요, 실제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20대 남성이 한 회사에 "폭탄 폭발까지 2분 남았다"고 위협 전화를 걸었다가 징역형과 함께 한화로 6억3천800만원을 배상해야 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내의 가벼운 처벌 관행이 모방 범죄를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하는데요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처벌받지 않거나 경미해서 역제가 불가능해진다며, 이런 협박 글을 올리는 친구들이 중 청소년이 많은데, 재밌고 흥분되는 놀이감으로 본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법 시행 초기일수록 엄중한 처벌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하는데요, 고영권 제주지방변호사회장은 시행 초기부터 신속 확실히하고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범죄 예방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영업 손실에 대해서도 철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효성 있는 집행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공중협박죄는 이름뿐인 법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공중협박죄 신설 배경과 실제 처벌 현황을 짚으며 법의 실효성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국내 처벌 수준의 문제점을 보여주고, 전문가 의견을 담아 향후 개선 방향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 보도에서 다루고 있는 논의의 발전을 위해서는 단순히 ‘처벌이 약하다’는 문제 제기 외에 처벌 수위가 낮게 나오는 이유와, 사법부가 고려하는 양형 사유를 조금 더 설명할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등의 현장을 들어가며 실제 손해가 얼마나 발생할 수 있는지 체크해 볼 필요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협박이 얼마나 큰 피해를 가져오는지 그리고 처벌의 수위가 왜 높아져야 하는지를 좀 더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들에게 온라인에 적는 장난 글이 사회 전체를 불안과 혼란에 빠뜨리고 매우 큰 피해를 가져온다는 점을 한 번 더 강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번 단속은 지난 28일 발표된 범정부 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경찰은 전국 시·도경찰청에 400여명 규모의 전담 수사인력을 증원하고 서울·부산경찰청 등에 전담 수사부서를 신설한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피싱 범죄는 1만 6,561건, 피해액은 7,992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는데요, 경찰은 "신고보상금을 최대 5억원까지 대폭 상향했다"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한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경찰이 대대적인 피싱 범죄 특별 단속에 나선다는 사실을 신속히 전달하고, 단속 기간과 인력 확충, 전담 부서 신설 등 구체적 대응 방안을 시청자들에게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 건수와 피해 액수도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있는데요, 함께 신고보상금이 매우 커진다는 내용도 전달해 시청자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피싱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어 파악이 힘들다는 것을 강조하고 최근의 피싱이나 스미싱 피해 사례 등을 함께 소개했다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또한 피싱 범죄 예방은 단속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일상에서 주의해야 할 간단한 예방 요령과 의심될 경우 즉시 신고해서 주변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지난 달 31일 와이드08에서는 최근 첨단기술 발전 속에 AI를 접목한 수사기법이 곳곳에서 활용되고 있다면서, 그간 추출

이 어려웠던 여러 개가 겹쳐있는 지문에 대해서도 신속한 과학수사가 가능해졌다고 전했습니다. AI 기술을 활용한 지문 분리 소프트웨어인데요, 잘 보이지않던 지문이 프로그램을 돌리자 선명하게 드러난다고 합니다. 살인·절도 등 범죄 현장에서 범죄의 핵심 단서인 지문을 추출하는 역할을 한다고 전했습니다. 지금부터 기자가 한 모금 마신 이 음료수캔으로 제 신원이 밝혀지는 과정을 보여드리다면서, 먼저 확보한 음료수캔에 붓질을 반복하며 분말을 흡착시키고 이렇게 선명해진 지문을 최대한 여러 각도로 확인하며 본을 뜹니다. 여러 사람의 손을 타 지문이 겹쳐 있고, 성분표 속 글자 등 지문 해석이 어려운 상태지만 소프트웨어에 채취한 지문을 업로드하니, 금세 분석을 통해 지문의 원모양과 형태 등이 드러난다면서, 그간 특정 위치에 지문이 여러 개 겹쳐 있는 경우나, 배경 무늬 등에 지문이 있을 경우 개별 지문을 분리해 감식하기 어려웠는데, AI를 접목한 첨단기술로 보완했다고 전했습니다. 용선 등 지문 고유 패턴에 대한 이해부터 끊긴 지문 등 약 50만건 이상의 변형 사례도 학습해 정확도를 높였다는데요, 장지환 유케이트론 대표는 AI 기반으로 빠른 시간 안에 약 2초에서 3초 안에 지문을 추출할 수 있고, 저비용으로 해결할 뿐만 아니라, 감정관들이 보다 고도화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줄 수가 있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기존 방식으로 검출이 어렵던 지문도 수월하게 확인할 수 있고, CCTV 등이 없어 지문 감식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수사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반응입니다. 이은주 경기남부경찰청 과학수사과 직원은 최근에 발생한 절도 사건에서 그 헤드셋 표면에서 지문을 현출을 했는데 1차로 지문 검색이 안되었으나, 겹친 지문 분리 시스템을 활용해서 지문을 분리한 후에 신원을 특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갈수록 지능화되는 범죄 수법 속에서 경찰은 AI를 활용한 첨단수사 기법으로 한 발짝 더 앞서가고 있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방송 내용은 AI 기반 지문 분리 기술을 소개하며 첨단수사 기법이 범죄 해결에 실제로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자가 직접 음료수 캔을 활용해 그 과정을 시각적으로 전달한 것도 꽤 집중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실제 사건 해결 사례나 향후 적용 범위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고, 현장에서 얼마나 범죄 해결에 기여하고 응용될 수 있는지도 살펴보면 좋았을 것입니다. 범죄 현장에서 과학수사의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되는 상황에서 이를 이해하고 협조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 달 31일 뉴스1번지에서는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게 맞는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법논리상 부과되는 게 맞지만 그동안 노인 빈곤 방지 등을 이유로 집행되지 않았다면, 하지만 최근 관련 법이 발의되면서 다시 논란으로 떠올랐다고 전했습니다. 건강보험법과 소득세법 등 현행법에 따르면, 건강보험료는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 같은 사적연금 소득도 부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그동안 사실상 부과되지 않아 왔는데요, 노인 빈곤을 심화할 수 있고, 퇴직연금 등을 일시금으로 선택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데다 이중과세 논란으로 변질 수 있는 만큼 '법 적용의 예외' 영역으로 남아있던 겁니다. 그런데 감사원과 국회에서 '법적 근거 없는 위법'이라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예비 은퇴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었는데요, 그런 가운데 최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일정 소득 이하 사적연금에 대해 건보료를 면제하는 법안을 발의해 이목을 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연금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는 은퇴자에 한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하의 사적연금 소득에는 건보료 부과를 면제하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되면 건보료 부과 대상을 명확히 규정해 논란의 여지가 없어지겠지만 예외에서 제외된 사람들은 건보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정부는 방향성은 맞다면 조심스러운 입장인데요, 조충현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방향성에 대해서는 맞다고 생각한대며, 다만 국민의 수용성이라든지 또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간의 형평성, 또 사적연금 상품 종류별 과세 여부라든지 방식 등이 다양하다고 전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도 "정책적 결정 사안이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는데요, 10년이 다 돼가는 '배려나 원칙이나' 논란을 마무리 짓기 위해선 각 주체들이 동의하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해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는데요, 매우 민감하면서도 시청자의 생활과 직결된 사안입니다. 법적 근거와 그동안의 관행, 국회의 법안 발의까지 흐름을 설명한 것은 시청자가 현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연금소득자 입장에서 피부로 와닿는 건보료 부과시 예상되는 구체적 영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였는데요, 예비 은퇴자 가계에 미칠 영향이나 연금 일시금 선택 증가 같은 현실적 문제를 수치를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들에게 단기적인 불안이 있더라도 장기적 방향을 이해하고 사회적 합의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언급도 필요했습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TV, 시청자 평가였습니다.

● 안지연 시청자평가원(25. 09. 14. 방송) : <바로보는 TV 음부즈맨 720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한주간 보도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안지연입니다. 학교폭력이 디페이크나 온라인 범죄 등 다양한 양상으로 변지고 있습니다. 이제 학교폭력은 교실 안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온오프라인을 동시에 위협하는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변지고 있는데요, 지난 6일 오전 8시 뉴스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보도는 청소년 사이에서 확산되는 디페이크 등 신종 학교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 전담 경찰관이 학부모를 대상으로 예방 교육을 실시한 데 주목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직접 청소년들의 채팅방을 재구성한 자료를 보여주며 디페이크 사진 한 장이 어떤 범죄로 변질 수 있는지를 설명하며 디페이크 범죄에 대한 개념을 설명했습니다. 교육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학교폭력 대응과 예방법에 대해 정확히 알게 돼, 가정에서부터 교육해나갈 것이라는 의견을 전했고 상담심리사는 아이들이 실수나 오프라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범죄로 이어진다는 부분이 교육적으로 많은 효용가치를 지닌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보도는 경찰은 수도권 일대에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도박과 기술범죄 등 신종 학교폭력 유형의 대처법 등을 담은 강연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보도는 학교전담경찰관들이 다양한 형태의 학교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학교전담경찰관이 직접 사례를 바탕으로 신종 학교폭력의 위험성을 알리고, 학부모와 전문가의 목소리를 담아 교육적 효과를 강조했다습니다. 특히, 학교폭력 대응 교육이 학교 안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아낸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더 이상 학교폭력이 교실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온라인과 일상 전반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과제임을 짚어준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활동이 학교폭력 예방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학교폭력에 노출되어있는 청소년들의 인식 변화는 어떠한지 등은 다루지 않아 단순히 교육 현장을 보여주는 수준에 머물렀다는 인상을 남겨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이를 조명했다면 보다 깊이 있는 보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온라인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매장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구매 기회로 느

껴지는데요, 하지만 너무 큰 할인율에 속아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보도는 SNS 광고를 통해 유명 브랜드를 사칭한 가짜 사이트의 확산으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는 현실을 조명했습니다. 한국소비자의 자료를 인용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유명 의류 브랜드 사칭 관련 소비자 상담이 137건으로 나타났고, 접속 경로가 확인된 건 중 94%가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최근 사기 의심 사이트에서 정품 이미지나 로고를 그대로 쓰는 등 공식물처럼 꾸며 쓰고 있어 소비자가 진위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워, SNS에서 큰 폭으로 할인된 가격에 광고하는 쇼핑몰은 일단 의심하고,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 등록된 사기 의심 사이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한국소비자의 조언을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구입일로부터 120일 안에 취소 요청을 할 수 있는 차지백 서비스가 가능한 신용카드를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보도는 SNS에서 저렴한 가격을 내세운 광고로 인해 늘어나고 있는 소비자 피해를 다뤘습니다. 특히 유명 브랜드를 사칭한 가짜 사이트 사례를 제시하고 한국소비자원 자료를 인용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전달했습니다. 특히, 한국소비자원 통계를 인용해 SNS를 통한 사기 상담이 다수를 차지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실제 피해의 심각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줘 경각심을 높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 활용 등 소비자가 즉시 실천할 수 있는 대응책을 안내해 보도의 실용성을 높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도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메시지만 강조하는데 그쳐, 플랫폼 사업자나 정부 차원의 제도적 대응은 다루지 못했습니다. 추후 관련 보도에서는 제도적 개선 방향과 한계 등을 다뤄 보다 심층적인 보도가 이어지길 바랍니다. 최근 초등학교생을 대상으로 한 유괴 미수 사건이 발생해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건 당시 경찰의 미흡한 초동 대응 문제까지 불어지며 직접 자녀의 등하굣길에 나서는 학부모들이 늘고 있는데요, 경찰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초등학교 순찰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의 관련 보도 살펴보겠습니다. 보도는 서울 서대문구 유괴 미수 사건 이후,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자녀의 하굣길을 직접 지켜보는 현상이 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 학부모는 남학생이라 안심했던 자녀까지 테러러 나오기로 했고, 또 다른 학부모는 학원 차량 대신 매일 직접 학교 앞을 찾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사건 당시 경찰의 미흡한 초동 대응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경찰은 재발 방지를 위해 서울 시내 600여 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다음 달 12일까지 5주간 통학로에 경력을 배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구청, 교육청과 함께 등하굣길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등 각종 범죄와 안전사고에 대한 위화요소를 찾아낼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아동 사건은 과할 정도로 확인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아쉽다며, 아동범죄 신고는 코드1 이상으로 지정해 강력한 초기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난 피의자 2명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해 혐의가 드러날 경우 재신청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보도는 최근 발생한 초등학교생 대상 유괴 미수 사건을 계기로,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음을 전했습니다. 특히 사건 당시 경찰의 미흡한 초동 대응 문제가 지적되며 학부모들이 직접 등하굣길에 나서고 있다는 현장의 분위기를 담았습니다. 이어 경찰이 학생 안전을 위해 순찰 인력을 집중 배치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주변 현장을 직접 취재해 학부모 목소리를 전달해 시청자의 공감을 높였습니다. 이번 보도는 사건 이후 높아진 사회적 불안을 환

기하고 경찰의 대응 조치를 알린 점에서 의미 있는 보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도는 순찰 강화 외에 장기적 대책이나 제도적 보완 등에 대한 내용은 다루지 않았다는 점은 아쉽게 느껴집니다. 아울러 사건에 노출되어있는 학생들의 목소리는 전달되지 않아 대책의 실효성을 가늠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추후 관련 보도에서는 학부모와 경찰의 대응뿐만 아니라, 학생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담아 제도적 방향과 한계를 짚는 보도가 이어지길 바랍니다. 최근 미국에서 구금됐던 우리 근로자들이 전세기를 통해 귀국길에 오르게 됐습니다. 관건은 불법체류 기록이 남아 추후 비자 발급이나 미국 입국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이었는데요, 정부는 이 부분을 미국과 협의해 해결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보도는 구금시설에 갇혀있던 우리 근로자들이 전세기를 통해 12일 새벽,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이들이 재입국할 때 불법체류 기록이 남아 비자 발급이나 입국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국 측과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보도는 앞서 예정했던 귀국 일정이 돌연 지연된 배경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구금된 한국인 직원들은 숙련된 인력들로 평가하며, 미국에 남아 계속 일하면서 미국 근로자들을 교육하는 것을 권유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체포와 구금 생활로 심신이 지쳐있는 근로자들이 한국으로 돌아갔다 오는 제안을 미국 측이 존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요청한 수감 등 신체적 속박 없이 전세기까지 이동해야 한다는 것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외교부 장관은 장기적으로 우리의 투자에 맞춰서 새로운 비자 형태를 만드는 등 불편을 막기 위한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도는 미국에서 구금됐던 우리 근로자들이 전세기를 통해 귀국길에 오르게 된 과정을 전달했습니다. 귀국 일정이 지연된 이유, 불법체류 기록과 재입국 불이익 문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과 승인 사항까지 차례대로 짚으며 사건의 흐름을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 특히 핵심 쟁점을 정리해 시청자들에게 전달해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귀국 소식을 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과정과 의미를 설명해 맥락을 분명히 했다는 점도 보도의 장점입니다. 후속 보도를 통해 귀국 이후 우리 근로자들이 다시 생활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현실적 한계와 지원 방안 등을 함께 다룬다면, 이 사안이 갖는 함의를 더욱 분명히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TV, 시청자 평가였습니다.

● 김정원 시청자평가원(25. 09. 21 방송) :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721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한 주간 보도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TV를 말한다 김정원입니다. 통신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부의 강력한 대응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기본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오고 있는데요, 연합뉴스TV 보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4월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 이후 통신3사 모두 개인정보 유출 논란에 휩싸이면서 시민단체들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SKT는 방통위의 위약금 면제 기간 연장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고, 참여연대는 "3~4년간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위약금 면제 기간이 열흘에 그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개인정보를 단순 데이터가 아닌 개인

의 기본권 수준으로 취급해야 하며, 범부처적 컨트롤타워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통신사와 금융권 해킹 사고에 직접 나서 강력한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보안 사고를 반복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정벌적 과징금을 포함한 강력한 대치가 이뤄지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회에서는 정부의 강제 조사 권한 확대와 24시간 이내 신고 의무화 등을 담은 법안들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현행법상 '중대한 침해'에만 가능했던 민관 합동조사단 구성을 일반적인 침해 사건까지 확대하고, 통신사 등의 해킹 신고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들이 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의 통신사 개인정보 유출 관련 보도는 사건의 경과와 정부의 대응, 그리고 제도적 개선 방안까지 포괄적으로 다뤘다는 점에서 균형 잡힌 보도였습니다. 시민단체와 전문가 의견을 통해 다각적인 시각을 제공하고, 현행법의 한계와 개정 필요성을 명확히 설명한 점도 돋보입니다. 특히 개인정보를 기본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안을 통해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를 '기본권 수준으로 격상'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현재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와 기본권 차원의 보호가 어떻게 다르며, 실제 법적·제도적 변화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면 시청자들이 전문가 제안의 의미를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미국 조지아주에서 일주일간 구금됐던 한국 근로자가 몰래 작성한 구금 일지가 공개되면서 현지에서 벌어진 인권 침해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연합뉴스TV 보도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에서 구금됐던 한국 근로자가 일주일간 몰래 작성한 구금 일지가 공개됐습니다. 일지에는 구금 시설의 구조도와 함께 체포부터 구금 생활까지의 인권 침해 상황이 일자별로 빼곡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체포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 고지나 영장 서류 설명 없이 이민세관단속국이 기습적으로 들이닥쳤고, 9시간 대기 후 케이블타이로 손목을 결박당한 채 호송차로 이동했습니다. 72인실 임시 시설은 곰팡이가 핀 이층침대와 가림막 없는 공용 변기 등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구금 3일째 이민 당국 인터뷰에서 요원들은 체포 이유 대신 '북한', '로켓맨' 등을 언급하며 조롱섞인 발언을 했습니다. 구금자는 "나를 두고 장난하는 것 같아 화가 났지만 참았다"고 기록했습니다. 또한 총영사관이 제대로 된 사태 파악 없이 "무조건적인 귀국에만 집중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연합뉴스TV의 조지아 노동자 구금 일지 보도는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1차 자료를 통해 사건의 실상을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구금 시설의 구조도와 일자별 기록, 현장 사진까지 확보해 단순한 증언을 넘어 객관적 증거로서의 가치를 지니는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또한, 총영사관의 소극적 대응까지 포함해 우리 정부의 재외국민 보호 체계의 한계까지 짚어냈습니다. 다만, 총영사관의 소극적 대응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점이 충분히 다뤄지지 않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구금자가 "무조건적인 귀국에만 집중했다"고 토로한 부분이 단순히 개인적 소감으로만 처리되었을 뿐, 영사 업무의 기본인 재외국민 보호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에 대한 검증이나 문제 제기가 부족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내 이민자 구금 시설의 일반적 상황과 비교한 분석 등이 제시되었다면 사건을 더욱 객관적으로 조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글로벌 디지털 패권을 둘러싼 미중 갈등 속에서 틱톡을 둘러싼 양국의 협상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보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4차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틱톡 처분 방안에 대해 큰 틀의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젊은이들이 구해내고 싶어 했던 특種 기업에 대해서도 합의에 도달했다"며 성과를 자랑했습니다. 베선트 재무장관은 "미국이 통제하는 소유권으로 전환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19일 양국 정상 통화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위해 틱톡 지분 매각에 동의했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알고리즘 기술 이전 여부가 관건으로 남아있습니다. 중국 측은 "자국의 원칙적 입장과 기업 이익을 희생하지 않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틱톡 합의에도 불구하고 관세 등 핵심 무역 쟁점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 추가 협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연합뉴스TV의 미중 틱톡 합의 보도는 복잡한 국제 무역협상의 진전과 한계를 균형있게 전달했습니다. 양국 주요 인사들의 발언을 통해 미국과 중국의 서로 다른 입장을 명확히 보여줬고, 틱톡 문제가 단순한 기업 인수를 넘어 국가 안보 차원의 복합적 쟁점임을 잘 설명했습니다. 다만, 틱톡의 경제적 파급효과나

이번 합의가 향후 중국 기술기업들에게 미칠 선편적 의미, 그리고 글로벌 디지털 패권 경쟁의 맥락에서의 분석이 추가되었다면 보도의 깊이를 더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기업 활동을 옥죄는 각종 규제와 처벌 조항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보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핵심규제 합리화 전락회의'를 주재하며 기업 활동에 대한 불필요한 처벌과 거미줄 규제를 대대적으로 손질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데이터, 자율주행, 로봇 등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들이 주요 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기업 활동 관련 처벌조항이 과도하게 많아 오히려 사업 위축을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여당에서는 배임죄 폐지를 제안했고, 구운철 부총리는 "1년 안에 전부처 경제형벌 규정을 30% 정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연합뉴스TV의 규제 합리화 보도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구체적으로 전달하며 정책 의지를 명확히 보여줬습니다. 대통령의 직접 발언과 함께 관련 부처와 업계 의견을 균형있게 소개해 규제 개혁의 필요성과 구체적 방안을 입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신산업 규제뿐만 아니라 기업 활동에 대한 과도한 처벌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다룬 점이 돋보입니다. 배임죄 문제를 구체적인 사례로 들어 기업 경영진의 위축 효과를 설명한 것은 정책 논의의 실질적 방향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만, 규제 합리화가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이나 우려에 대한 균형적 시각이 부족했습니다. 기업 자율성 확대에 따른 투명성 약화 가능성이나 경제형벌 완화에 대한 시민사회의 다른 의견도 함께 제시되었다면 정책 논의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국내 이커머스 업계의 연쇄 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패션 플랫폼 브랜드까지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업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요, 연합뉴스TV 보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한때 유니콘 기업을 꿈꿨던 패션 플랫폼 '브랜드'를 운영하는 뉴넥스가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습니다. 네이버와 산업은행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했던 기업이지만, 급격한 실적 악화를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2024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자본잠식 상태였고, 매출액은 전년 대비 65% 감소했습니다. 기업가치도 2년새 92% 급락하며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중국계 이커머스의 국내 공습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브랜드의 월간 활성이용자수는 1년 전보다 40% 이상 감소한 반면, 중국계 패션 플랫폼 쉬인은 압도적인 사용자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티몬·위메프에 이어 올해 발란까지 유통업체들의 기업회생 신청이 잇따르고 있어, 유통업계 '도미노 위기'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의 브랜드 기업회생 신청 보도는 국내 이커머스 업계의 구조적 위기를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체계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정확한 재무 데이터를 제시해 기업의 어려움을 객관적으로 보여줬고, 월간 활성이용자수 비교를 통해 중국계 플랫폼과의 격차를 구체적으로 드러냈습니다. 특히 단순한 기업 부실을 넘어 티몬·위메프, 발란으로 이어지는 연쇄 위기의 맥락에서 접근한 점이 돋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연쇄 위기가 소비자 and 입점 업체들에게 미치는 구체적 피해 규모나, 정부 차원의 이커머스 생태계 보호 방안에 대한 논의가 추가되었다면 보다 종합적인 분석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울러 해외 이커머스 플랫폼 규제나 국내 업체 지원 정책과 같은 정책적 대응 방향도 제시되었다면 단순한 현상 보도를 넘어 해결 방안 모색에도 기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TV, 시청자 평가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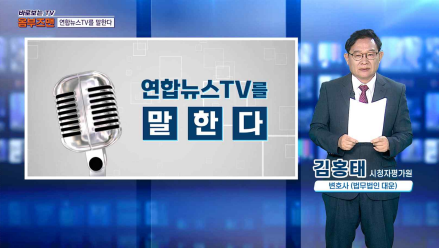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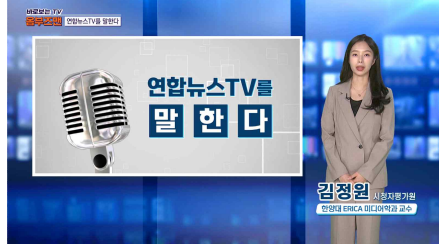
● 최미연 시청자평가원(25. 09. 28 방송) :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722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한주간 보도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최미연입니다. 사법개혁을 둘러싼 갈등이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대법관 증원 논의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발언은 사법부 내부의 긴장을 보여주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사법개혁 공세와 정치공작 규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보도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여권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안과 추천 방식 개선안이 주요 의제로 토론했을 예정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세종대왕의 법 철학을 강조하며 법은 통치 수단이 아닌 국민 권리 보장의 토대라고 밝혔는데, 일각에서는 이를 사법개혁안에 대한 우회적 비판으로 해석했

습니다. 법관대표회의의 분과위는 대법관 증원 필요성에는 경청할 부분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대법관 수가 급격히 늘 경우 전원합의체 운영이 단순 다수결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이번 회의가 정치권과 맞닿은 사법개혁 논의 속에서 사법부의 공식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연합뉴스TV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사법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회동설 논란에는 거리를 두면서도 사법부의 정치개입 의혹을 핵심 쟁점으로 강조했고, 국민의힘에 반헌법적 범죄 수사 협조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와 기재부 개편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회동설’을 “조작된 음성과일을 이용한 정치공작”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민주당의 사법개혁을 1인 독재 체제로 가려는 시도라고 주장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가짜뉴스가 아들 인생을 망쳤다’고 언급한 점을 문제 삼으며 여권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대구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어 강경 보수층을 결집시키고 대어 투쟁 수위를 높였습니다. 연합뉴스TV 보도는 사법개혁을 둘러싼 정치권과 사법부의 대립을 통해 현안의 시의성과 파급력을 효과적으로 보여줬습니다. 특히 법관대표회의 논의, 여야의 공방, 장외 집회라는 흐름을 연결해 시청자가 사건의 큰 그림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강점입니다. 그러나 개별 사건의 배경과 쟁점, 대법관 증원과 같은 제도 개편이 실제 사법부 운영과 국민 권리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한 해설이 부족해 갈등 구도만 강조된 한계가 있습니다. 이는 결국 사법개혁이 단순히 정치 공방의 소재가 아니라 사법부 신뢰 회복과 제도 개선의 과제를 안고 있음을 시사하며, 향후 단순 전달에 그치지 않고 제도적 함의와 대안을 함께 짚어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개인정보가 더 이상 개인정보가 아닌 것 같습니다. 불과 5개월 전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에 이어 KT 기지국 해킹과 최근 롯데카드 등에서 소비자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7월까지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778만건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유출 건수를 넘어섰습니다. 지속되는 개인정보 유출에 우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응책은 없을지, 연합뉴스TV 보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통신사와 카드사 등 곳곳에서 보안이 뚫리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연합뉴스 TV의 보도에 따르면, 지속되는 개인정보 유출에 정부는 보안 위반 제재를 강화해 기업 책임을 확보하겠다고 했습니다. SK텔레콤의 고객 정보 유출에 이어, 에스24와 SGI 서울보증은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고, 최근 KT는 간이 기지국 해킹을 통한 무단 소액결제 피해와 내부 서버 침투까지 확인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해킹과의 전쟁에 임한다는 각오로, 이번 사고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 권한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롯데카드에서 해킹 피해 안내를 받은 가입자 1만여 명의 유출 내역이 뒤늦게 바뀐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롯데카드 측에서는 고객의 이름과 생년월일만 유출됐다고 밝혔지만, 다음날 카드번호와 CVC, 비밀번호 앞자리까지 추가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롯데카드 측은 추가 유출 항목이 있는지, 확인된 피해자 이외에 신규 피해 고객이 있는지에 대해 확인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의 보도는 잇따른 보안사고의 심각성을 다양한 사례와 통계를 통해 구체적으로 전달하며, 이를 사회적 위기가자 제도적 문제로 인식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피해 규모 확대와 기업의 불완전한 대응 과정을 드러내면서 시청자가 생활 차원의 불안과 구조적 한계를 동시에 체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제재 필요성과 제도 개선 방향을 언급하면서도 피해자 관점에서의 심층적 목소리나 원인 분석은 부족해, 사건의 본질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구속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시작으로 김건희 씨 학폭 무마 의혹과 뇌물 혐의 수사까지 이어지며 특검 수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검은 수사 기간을 연장하고 관련자 소환을 예고하며 수사 고삐를 더욱 조이고 있는데요. 연합뉴스TV 보도를 통해 주요 흐름과 파장을 짚어보겠습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서울구치소 독방에 수감되면서 ‘통일교 집단 입당 의혹’ 수사가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공범으로 지목된 권성동 의원은 특검 조사에 불출석했습니다. 특검은 또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 무마 의혹에 김건희 씨가 관여했는지 정식 수사로 전환하고, 관련자 소환을 예고했습니다. 아울러 김건희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뇌물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우환 화백의 그림이 김건희 씨에게 전달된 정황을 뇌물 혐의로 보고 25일 김건희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특검은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기로 했으며, 동시에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연합뉴스TV 보도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속을 시작으로 권성동 의원 불출석, 김건희 씨 학폭 무마 의혹과 뇌물 혐의,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수사까지 특검이 다루는 주요 현안을 종합적으로 소개하며 사건의 파장과 중대성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수사 기간 연장 결정까지 함께 다뤄 시청자가 특검 수사의 전반적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시의성과 종합성이 돋보였습니다. 그러나 사건별 배경과 쟁점에 대한 구체적 맥락은 충분히 설명되지 않아, 시청자가 각 사안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기보다는 단순히 사건이 확대되고 있다는 인상에 머물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전달 보도로서는 적절했지만, 분석적 깊이를 보강할 필요가 있는 보도였습니다. 근로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 처벌하는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근로자의 사망 및 재해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아리셀 대표 박순관씨에게 최고형이 내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 보도를 통해 반응을 짚어보겠습니다. 경기도 화성 배터리 공장 ‘아리셀 참사’로 23명이 숨진 사건에서 법원이 박순관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법 시행 후 최고 형량으로, 박 대표는 법정 구속됐고 아들 박중언 본부장도 같은 형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안전보다 이윤을 앞세운 기업 문화를 질타했으며, 아리셀 법인과 과견업체에도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연합뉴스TV의 보도는 중처법 시행 이후 최고 형량이 선고된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법원의 판결과 재판부의 질타를 충실하게 전했습니다. 특히 “예고된 인재”라는 표현이나 “이윤 극대화 앞세운 산업 구조”라는 재판부의 발언을 담아, 산업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점은 보도의 강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SPC, 포스코 등 근로자 재해 사건과 관련된 후속 논의가 다뤄지지 않았다는 점은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15년 선고’의 상징성은 잘 드러냈지만, 법 적용의 불균형 문제나 제도 개선 논의와까지 충분히 이어지지 못해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TV 시청자 평가였습니다.

※대표 방송스틸컷

일시/장면설명 2025년 9월 7일 04시/ 김홍태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일시/장면설명 2025년 9월 14일 04시/ 안지연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일시/장면설명 2025년 9월 21일 04시/ 김정원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일시/장면설명 2025년 9월 28일 04시/ 최미연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 